



## □ 연도별 세부추진계획

연도별	추진사항	비고 (진도율)	
2018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</li> <li>·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 추진체계 구축</li> </ul>	15%	
임기내	2019년도 상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지방 사무배분 원칙 등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</li> <li>· 지방이양대상 기능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</li> <li>·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</li> <li>· 주민자치회 설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</li> <li>·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</li> <li>·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응</li> </ul>	30%
	2019년도 하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민 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 합리적 완화 추진</li> <li>·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</li> <li>· 주민자치사업 실행력 확보 근거마련(조례 제정 등)</li> <li>· 지방이양대상 기능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</li> <li>·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</li> </ul>	40%
	2020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이양대상 기능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</li> <li>· 마을유형별 운영모델 개발 및 주민자치 제도 개선</li> <li>·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의제 사업 추진</li> </ul>	60%
	2021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이양대상 기능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</li> <li>·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</li> <li>·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</li> </ul>	80%
	2022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이양대상 기능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</li> <li>·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</li> </ul>	100%
임기후			

## □ 추진상황

- 정부 개헌안 국회의결 불성립(5.24) 후 지방분권 개헌 지속 추진여부 불명확
-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재정분권 TF팀 운영 및 의견수렴을 통해 「재정분권 종합계획」 수립 추진 중
- 518개 사무에 대한 지방제정일괄법 제정 추진('18년 내 입법 예정)
-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계획 수립('18. 6.)

## □ 기대효과

- 지방자치의 본질적 이념과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
-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의 참여욕구 증대에 부응